檢, "국민의당 지도부 개입 없었다"

김성호 · 김인원, "진위 여부 확인 않고 폭로" 불구속 기소
"이용주, 제보 조작 인식 못해"… 공명선거추진단에 단순 전달
"박지원 · 안철수 개입 의혹 충분히 조사, 객관적 증거 미발견"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 2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이날 추진단 관계자들을 기소하고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민의당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54)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추진단 단장이면서 보고 체계의 정점에 위치해 있었던 이용주(49) 의원에 대해서는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준서(40 · 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5월7일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지난 5월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실시한 5월3일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이라며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5월6일 준용씨와 제보자로 지목된 이들의 파슨스디자인스쿨 재학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2차 폭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앞서 이유미(38 · 구속기소)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에 대한 증빙 자료 명목으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의 모바일 메시지와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었으며 음성변조 파일 또한 이씨의 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국민의당에서 준용씨 취업 특혜와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발표하게 된 최종 책임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있다고 봤다.

당시 추진단 단장이던 이 의원이 5월4일께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증과 발표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 부단장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이 의원이 4월24일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식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단장직을 사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5월4일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발표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때 추진단장 직책도 내려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 자료를 김 전 의원 등에게 전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맞으나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전달자 역할만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이 제보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할만한 별도의 증거를 찾지 못해 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에 건넨 허위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추진단 관계자들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 당직자 등을 통해 조작된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 전 대표나 안 전 대표가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을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누군가 허위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정황이나, 전송된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14일 이씨를, 28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를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이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진단 관계자들을 설득해 5월7일 조작된 제보에 기초한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이 재차 공표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하고 이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대선 기간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죄송합니다 '이유미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차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마친 이용주(왼쪽부터), 조배숙 의원, 천정배 전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 부실 당내 조사 입장 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대선기간 당내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꼬리 자르기식 부실 자체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들이 포함됨에 따라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향후 재판과정에서 기소 처분된 5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비롯해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의당 대선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제보 조작 자료를 만든 이유미씨와 이씨 남동생, 자료를 건네받아 언론에 공개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5명을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뉴시스

당정 "탈원전 해도 2022년까지 요금 인상 없어"

"올 여름 1000만KW 예비전력… 2030년 부족분 10GW 신재생 에너지 · LNG발전소로 가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당정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단기적 전력수급에 우려에 대해서는 "올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년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피크수요는 8650만KW로 전망돼 1000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이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해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해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장기적인 전력수급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예상된다"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30년 수요인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0년부터 부족한 10GW에 대해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의장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전력수급 전망치가 달라진 것과 관련, "자료를 임의로 쓴게 아니라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망을 쓴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서 산업부가 자료를 임의로 넣어서 수요 전망을 조작했을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칠승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 김병관 · 박재호 · 송기헌 · 이훈 · 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백 장관과 이인호 산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뉴시스

송영무 "文대통령에게 사드 전면 배치 건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면적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그 조치를 위해 임시배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완전 배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임시배치를 건의했냐"고 다시 질문하자, 송 장관은 "그렇다. 그래서 결론이 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배치의 여부에 대해 "취소된다, 안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다"면서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환경영향평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사드 발사대 4기 조기 배치 검토 지시와 관련 "미국 측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직후 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올해 상반기에 성주에 배치가 됐고 남은 발사대 4기는 국내로 반입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